

# 북한 핵위협 극복을 위한 한미동맹 효용성: 평가와 대책

김연준\*

## 요약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기간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The Efficiency of ROK-U.S. Alliance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Evaluations & Measures

Kim Yeon Jun\*

### ABSTRACT

Last January 2017,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actively claimed a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referred as America First,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However, his political assertions turned out to be as Isolationist in terms of foreign policy. It becomes a serious problem for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is solely dependent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a higher likelihood for North Korea to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Due to his foreign policy, there is a possible provocation by North Korea.

Therefore, ROK-U.S. Alliance, the model of Asymmetry Alliance in order to prepare for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will be evaluated through America's perspective based on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ill evaluate ROK-U.S. Alliance with regards to a threat perception, policy coordination, and a value as an ally. Based on the evaluation, it will deduce tactical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alliance.

**Key words : ROK-U.S. Alliance, Asymmetry Allianc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접수일(2017년 5월 8일), 수정일(1차, 2017년 6월 28일),  
게제확정일(2017년 6월 30일)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 1. 서론

지난 2017년 1월 18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 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고 유권자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이민문제 등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한 것이지만, 대외문제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 경향으로 비춰지고 있다. 미국 대외정책에서 고립주의 표방은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발발하였던 6·25전쟁을 기점으로 지난 1953년에 조약을 체결한 이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군사협약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하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도발 위협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애 매진하여 안보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의 토대 하에 세계 속에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였던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는 항상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국가적인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경제 위상이 고양됨에 따라 2000년대에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200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정권의 선택에 따라서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와 국방에서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2016년에만 2번의 핵실험과 20여회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도발하면서 핵무기의 표준화·소형화·다중화를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작금에 현실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연이은 핵도발을 통해 우리와 재래식 군사대결에서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핵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대외협상력을 높이려는 ‘벼랑끝 전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심각한 가운데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였다. 새 행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핵전쟁 위협을 극복하면서 국가발전을 지속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인 한미동맹의 유용성을 동맹의 이론적인 관점과 그 시행의 주체인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으로 고찰하려 한다. 본고는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해, 현역군 하에서 북한 핵위협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책적 관심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북한의 핵 능력/ 의도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은 1980년대 이후 5MWe 원자로의 가동 및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였다.<sup>1)</sup> 북한은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하였으며, 김정은 체제하에서만 해도 3차례의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한바 있다. 그 결과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는 물론이고,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현재 북한이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1) ‘핵연료 주기’는 광석상태의 우라늄이 정련-변환-농축-가공 단계를 거쳐 원자로에서 사용된 후, 재활용 및 고준위 폐기물 영구처리 되기까지의 순 과정을 의미함.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후 연료 및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임.

핵탄두는 이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과 결합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핵탄두를 발사하는 방식은 지상,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하는 방식이 있다. 지상에서는 미사일을 통해서, 해상에서는 잠수함에서, 공중에서는 전폭기를 이용하여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두의 소형화에 주력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능력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

구 분	스커드급	노동/ 무수단급	ICBM급
사거리(Km)	300 ~ 1,000	1,300 ~ 3,000	10,000이상
탄두중량(Kg)	500 ~ 1,000	650 ~ 700	개발중

※ 출처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p. 239.

위 <표 2-1>에서와 같이 북한의 스커드급 미사일은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 무수단급 미사일은 일본과 괌 지역에 대한 투발이 가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1만Km이상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탄두무게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만 일부 보완한다면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핵폭탄과 투발수단을 완비한 북한은 평시·개전 초기·개전과정 중 등 다양한 시기에 그들의 정치적·군사적 목표달성과 협상카드 등의 다용도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대비태세는 무력한 정치·외교·군사적인 상태로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 2.2 동맹이론 고찰 : 비대칭 동맹

동맹(alliance)이란 체결국가간에 일방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내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방어하겠다는 약속으로서,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자국의 안전보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경제동맹, 가치동맹, 복합동맹 등의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맹은 군사동맹으로서 '잠재적 전쟁공동체'라고 불리기도 한다[1].

동맹을 체결한 경우에, A와 B의 두 국가는 자국이 원하지 않거나 불리하더라도 동맹국이 요청하면 가용한 모든 군사력과 국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서로에게 하고 있고, 자신이 상관없는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가의 명운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동맹은 좀처럼 형성되지 않지만, 형성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다수 국가의 세력경쟁 상황에서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16].

그렇다면 동맹이 잠재적 전쟁공동체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entrapment)될 경우에 강대국은 약소국으로부터 지원받을 군사력이 미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맹형성이 가능할까? 이러한 의문에 한미동맹과 같이 약소국과 강대국이 체결하는 비대칭적인 동맹도 충분히 가능하다. 알트펠드(Altfeld)와 모로우(Morrow)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을 근거로 비대칭동맹이 형성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7]. 비대칭동맹에서 강대국은 일방적인 지원만 베풀고 약소국은 일방적인 무인승차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은 약소국과 동맹을 통해 그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강대국은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신을 이익을 약소국의 제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즉 강대국은 약소국에 군사력을 지원하여 안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약소국의 정책에 그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약소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양보 받을 수 있다. 결국 약소국은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 안보를 지원받지만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유보함으로써 비대칭동맹이 작동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동맹을 체결하는 1차적인 목적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적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라면, 전쟁은 국제법적으로 불법화되어 있으며 국가 간에 전쟁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사라진 현재의 '냉전시대'(post-cold war era)에 과연 국가 간의 동맹이 필요한 것일 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월트(Stephen M. Walt)는 현시대 동맹의 종료와 유지를 분석하면서 현대에는 동맹을 새롭게 체결하지도 않지만 기존 동맹

을 쉽게 파기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8].

즉 월트는 현대의 동맹이 생멸(生滅)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핵심적인 요인을 ① 위협인식의 변화(changing perception of threat), ② 신뢰성의 저하(declining credibility)와, ③ 국내정치(domestic politics) 등으로 인식하면서 현대 동맹에 대한 교훈을 찾자 하였다[8]. 이러한 내용은 동맹공약 이행여부에도 원용될 수 있다. 즉 동맹국 간에 공통의 위협이 약화되고, 상호 간에 신뢰성이 저하되며, 지원국가의 국내정치여건이 부정적인 경우 동맹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맹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위 3가지 핵심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 인식 요인’이다. 이는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각 국가의 평가가 변화되었을 때 동맹의 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국간에 공통의 위협이 존재하고 이를 상호간에 인정할 경우 동맹이행 가능성은 더욱 높다. 특히 공통의 위협의 존재여부는 동맹의 결성과 해체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 수준이 크거나 명확할수록 동맹이행의 동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두 번째, ‘신뢰성 요인’은 상호간에 믿음이 약화될 경우 동맹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과 같이 비대칭동맹의 경우 위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에 따라서 양국이 안보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공조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치 요인’이다. 동맹문제에 국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주체라는 전제하에서 동맹이행이 가능여부, 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고 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동맹의 이행 혹은 철회여부는 정치 세력들의 합리적 판단여부가 관건이 된다. 이는 이러한 정치적 지지 혹은 철회는 동맹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고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① 군사력 지원가능 여부, ② 동맹 이행에 따른 이익, ③ 동맹 연루에 위협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국민의 지지여부를 확인하여 동맹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보면 한미동맹과 같은 비대칭 동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는 위협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상대적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약소국의 전략적 가치가 존재하여야 동맹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맹 유지 및 와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위협인식, 정책적인 협조, 전략적 가치 판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한미동맹 공약이행 사례, 평가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으로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는 대신에 자율성을 양보하는 구조로 시행된다. 이에 동맹의 이행요소별로 안보지원국인 미국의 입장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위협인식 면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은 동맹형성의 강력한 동인(動因)으로 작동한다. 또한 동맹국이 위협을 받던 적대세력이 더 이상 호전적이지 아니라고 인식할 경우 동맹은 해체되지 않더라도 그 성격은 변화될 수 있다 [9]. 미국은 6·25전쟁이 휴전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우여곡절 끝에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동인식하에 현재의 한미동맹을 탄생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전술(前述)한 동맹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하여 안보지원국인 미국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주요 사례위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미동맹을 체결할 당시에,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위협은 소련·중공·북한을 포

괄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팽창이었다. 이에 미국의 트루먼~존슨 행정부(1945-1969년)는 6·25전쟁 당시에 북한의 침략행위가 소련의 후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지역중 하나인 일본도 안보상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면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2]. 즉 당시에 북한의 도발 위협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세력들의 일부로 인식되는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1968년에 북한은 청와대 기습과 미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 납치를 한미동맹을 체결한 이후 가장 강도 높게 도발하였다. 위 청와대 기습은 1월 21일 밤 북한군 특수부대원 31명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청와대로 침투를 기도하였고,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이 진행되던 기간 중인 1월 23일에 83명이 탑승한 미 해군의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에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 하에 소탕작전을 논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보복과 한국군 현대화 지원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수방관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푸에블로호 납치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고, 일본으로부터 항공모함과 최신예 F-4팬텀기 대대 등 첨단전력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등 즉각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하였다. 또한 위 사건발생 2일 만에, 존슨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무장관은 북한의 나포는 '전쟁행위'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회부하였으며, 동시에 승무원의 안전한 송환을 위한 비밀협상도 시작하였다[3]. 결국 미국(유엔군사령부)은 한국 대통령을 살해하려는 청와대 습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군함의 납치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였으며 더하여 한국을 제외한 채 북한과 미국이 비밀협상을 벌이자 한미동맹 이행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어서, 1976년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북한과 전쟁도 불

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위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유엔군 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전방관측을 방해하는 미루나무를 잘라내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시행하려고 하자 북한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군장교 2명은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사망하였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한미 양국은 8월 21일 나무절단 작전으로 병력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위 절단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국 국무장관인 키신저(Henry A. Kissinger) 주재 하에 '워싱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였다. 미국은 일본·괌·본토에서 최신예 전투기와 전폭기 2개 대대 이상과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한반도 지역에 전개하였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미군)은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를 준전시상태로 격상시켰으며, 이러한 조치 후에 미 공병대와 특전부대 병력이 투입되어 1976년 8월 21일 문제가 된 미루나무를 절단하였다[3]. 미국의 그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북한의 도발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동맹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각오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sup>2)</sup>

그렇다면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현재의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어떠한가? 2014년 발표된 미국의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보면 세계 정세분석으로 첫 번째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의도의 불투명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전통적 닻'(traditional anchor)으로 일본, 호주와 함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15]. 이에 미국은 패권국가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전략적인 이해 충돌지역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은 중국의 불확실성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다.

2) 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한미양국의 단호한 조치로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작전을 수행하던 그날 오후 북한의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총사령관 명의로 휴전협정 이래 최초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음.

이상과 같이, 냉전시대 한미동맹의 공통 위협은 舊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 체제였고, 북한은 그 진영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공산진영이 붕괴됨으로써 북한은 개별적인 위협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별도의 계산에 의하여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게는 북한이 여전히 치명적인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중국보다 낮은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에서 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가 존재한다.

### 3.2 정책공조 면: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으로서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안보비용의 기회편익을 누리는 대신에 국가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양보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 한미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본문 제2조에서 ‘서로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을 경우에 서로 협의’하도록 약속하였고, 한국은 본문 제4조를 통하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고 있다 [12]. 한미동맹이 형성된 초창기 한국은 신생국가로 미국에 안보를 상당부분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동맹공약 이행의 결정적인 증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었다.<sup>3)</sup> 이들은 주둔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공격할 경우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갈등을 야기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닉슨 행정부(1969-1974년)와 그 후임인 카터 행정부(1974-1981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행되었다.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취임하게 된 닉슨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비등한 반전 여론과 과도한 전비(戰備)지출로 인한 경기불황 등을 해결해야만 했다. 이

에 그는 취임 첫해인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동맹국 방위의 1차적 책임은 동맹국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후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보병사단 2만 명과 3개 공군 비행대대를 철수시켰다. 그 결과 1960년대 후반에 62,000명 규모였던 주한미군 병력은 41,000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12].<sup>4)</sup> 닉슨 행정부에 뒤이은 카터 행정부는 (닉슨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절대 없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시절부터 한반도의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대통령 취임 직후 주한미군 33,000명을 재임 중에 철수하겠다고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대와 당시 미 8군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소장을 비롯한 미군 지도층의 저항으로 카터 대통령은 1979년 결국 철군정책을 중단하였고, 1978년 3,400명을 감축하는데 그쳤다[12].

닉슨과 카터 행정부의 철수계획은 부분적으로만 구현되었지만, 미국의 동맹공약 준수 여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회의가 증대되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당시 (한국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요청에 적극 동의하여 한국군을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대결구도를 해체하고 대신 미국사회 내부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제안보정책의 변화(대결⇒대당트 정책)를 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보지원국인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불가피하게 수용해야만 했다. 결국 닉슨·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안보를 지원(주한미군 주둔)하는 대신에 한국은 자율성 양보(한국군 베트남전쟁 파병)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단행으로 한미동맹의 결속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sup>

다음으로, 부시 행정부(1989-1993년)인 1989년 미 의회에서 주관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다시

3) 주한미군의 규모는 6.25전쟁 직후에 8개 사단, 32만 5천명에 달하였고, 한국의 국력이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미 8군 소속의 육군 19,200명, 미 7공군 예하 공군 8,800명, 미 해군 250명, 미 해병대 250명으로 총 2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로 인하여, 한국의 서부전선에서 휴전선을 담당하던 미 제2보병사단은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모든 휴전선을 한국군이 담당하게 되었음.

5) 닉슨·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향토예비군제도 창설,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음.

전개되었다. 민주당의 넌(Sam Nunn) 의원과 공화당의 워너(John W. Warner)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1992년 1단계(1990-1992년)로 7,000명을 감축하고, 2단계(1993-1995년)로 6,500명을 감축하며, 3단계(1996년 이후)에는 최소규모만 주둔한다는 내용으로 확정하였다[12]. 이에 대하여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나 미국은 결국 1992년 말까지 1단계에 해당하는 7,000명을 철수시켰다.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함으로써 위기가 고조되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 명 수준의 주둔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중단되었다[12].

주한미군은 미 동맹공약 이행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과 징표라는 점에서 이의 주둔 여부와 그 규모는 한미동맹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냉전구조가 해체된 이후 미국은 소련의 해제로 인하여 더 이상 미국의 안전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위협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미 의회가 주체가 되어 주한미군 철수를 주도하였다. 이에 한국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이행을 위해서 미국 행정부에 대하여 의회에서 논의되는 對한반도 안보정책 수립과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우리의 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안보 공약도 이행되지 않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 3.3 미국의 국내정치 요인

동맹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정치 요인의 합리적 판단근거는 자국이 보유한 군사력의 능력과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미국의 군사적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과, 동맹연루에 위협정도 순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미국의 군사력 지원 가능에 대한 판단이다. 미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병력은 138만여 명을, 전투(폭)기는 2천여 대를, 항공모함은 10척을, 그리고 잠수함은 71척을 보유하는 등 최첨단의 전력을 구비하면서 세계 1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나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 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60% 이상을 배치하고 있다[7]. 그리고 미국의 핵전력 규모는 그들이 러시아와 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유지할 전략핵무기의 양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미국의 핵전력(2018년 보유예정 기준)[10]

구분	발사대수	탄두 수
계	800	400
미니트맨 III	454	1,090
트라이던트	280	42
B-52	46	18
B-2	20	1,550

미국이 보유한 재래전·핵전 수행 능력은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압도적으로 제압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다수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므로 미 본토와 다른 동맹국의 안전을 고려하여 군사적 개입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로 위협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재래식 전면전이나 제한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장기전으로 전개될 경우에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회계연도에 5,34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2016년 말 미국의 누적된 공공부채는 정부예산의 3배가 넘는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국방비를 압박해 왔는데, 미국의 2010년 국방예산은 6,91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5,600억 달러와 2016년에는 5,800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쟁에 연루될 경우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4].

두 번째로, 한미동맹 이행에 따른 미국의 이익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동맹의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성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동맹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동맹공약을 신뢰하기 않을 것이고, 적대세력들도 미국의 개입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5]. 동맹의 공약을 회피하여 미국이 단기적인 위험부담에서는 벗어나더라도 세계전략 차원에서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반도 개입에 따른 연루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동맹관계는 기본적으로 연루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관계를 유지 혹은 다른 동맹국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사태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지원을 담당하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연루가 동맹 유지의 주된 수단이라서 연루를 포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 심대하게 위배될 경우 연루를 자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연루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관계의 본질이기도 하다.<sup>6)</sup>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이 6·25전쟁과 같은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경우 미국이 갖는 연루의 부담은 사활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버려자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연루의 위험성은 심각해졌다. 북한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하였고,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16년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멀지않은 시기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된 이후에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려고 할 경우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더하여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나 핵전쟁의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4]. 6·25전쟁의 경험에서 보듯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행동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여 개입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 대하여 이를 억제 혹은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 패권국가 입장에서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한반도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머지않은 장래에 핵전쟁 수행능력이 완성될 경우 한미동맹 이행은 국내정치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수준에서

한미동맹의 이행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4.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전략

### 4.1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정치·사회 분야)

북한의 핵개발은 지난 1965년에 영변지역에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가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부터 2017년 3월 현재까지 북한의 5차례의 핵실험, 다양한 사거리의 지상·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실험을 하였으며 고도화된 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 쏘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 스커드·노동 미사일 계열 미사일을 사용하여 핵공격이 가능하며, 이는 북한의 핵공격에 한국은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대하여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어떠한가? 15Kt 위력의 핵무기가 서울 용산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의 피해범위를 모의 실험한 결과 반경 4.5Km내 서울중심가는 완전히 증발하였고, 경기도 일산~수원일대까지 핵폭풍과 낙진 등의 피해로 사상자는 62만~125만여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17]. 북한의 이미 개발된 핵폭탄을 더욱 소형화·경량화 하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11].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핵을 보유한 현재, 한국은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한 유사 이래로 가장 위험한 시기에 봉착해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한 핵문제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과정은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북한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발전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지속되는 경제난과 3대 세습에 따른 체제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적·군사적으로 우리의 안보적 위협 되지 않을 것으로 속단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

6) 북·남베트남이 대립한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남베트남의 동맹국으로 전쟁을 주도하였으나, 1974년 북베트남의 침략에도 연루를 포기함으로써 남베트남은 패망하였음.



러한 국가적 자신감을 토대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8년)에서는 북한 문제를 화해와 포용의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시각은 북한의 위협 실체를 안이하게 평가하고, 군사적으로 북한군을 주적 개념에서 배제하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 등을 자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라며 북한의 위협실체를 외면하면서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위협이 엄중한 현 상황에서 그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비록 늦었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치권과 국민 모두는 비록 늦었지만 북한 핵위협으로 인해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실체적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그해결책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정치권부터 북한 핵위협의 엄중함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안보정세를 통찰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한반도를 지속가능한 안전과 번영이 약속된 땅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고해 해야 한다.

#### 4.2 한·미 안보정책 공조 강화(안보·국방 분야)

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자주국방이 반드시 자력국방일 필요는 없다는 보편적인 인식하에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국제체제에서 안보를 위한 동맹의 방식에 대하여, 월트(Stephen M. Walt)는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정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과성을 제시하였다[14]. 균형정책이란 자국에게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고, 편승정책이란 자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국가와 동맹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가장 위협이 큰 국가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편승동맹 보다는 균형동맹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THAAD)체계 한반도 전개 결정과 그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은 한미동맹 정책공조 차원에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은 미국이 한미

동맹의 공약을 확고한 의지로 이행한 사례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지휘기구를 상설화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합지휘체계 경우, 미국은 동맹의 결속도가 클수록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그 정도가 적을수록 별도의 지휘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안보전략 차원에서 유럽지역보다 그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국가위상도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는 한국과 연합지휘체계를 상설화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 일방적인 지원만 받던 한국이 국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국군을 전격적으로 파병하였으며, 또한 군사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형성된 한국·미국 간 혈맹으로서 파트너십(Partnership)을 주요요인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의 창설은 양국군 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구체화하는 수단이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전환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수평적 관계가 정립되었고, 공동의 사령부를 통하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위한 기획과 계획, 그리고 참모협조를 시작하게 되었다[12].

다음으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승인하면서, 지난 2017년 3월 오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해 반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드체계 한반도 반입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지루한 국론분열과 중국의 노골적인 주권개입을 야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위협은 멀지않은 시기에 완성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제공격할 수 있는 ‘킬체인체계’(Kill Chain)를 2020년 중반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13]. 핵공격에 대한 한국형 공격·방어체계 구축에서는 최첨단기술이 적용돼야

하는바, 목표처럼 2020년 중반까지 실전배치하는데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우리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하여 한국형 공격·방어체계가 완성될 수 있는 2020년 중반까지는 (현재 배치하려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가 없다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엄중해진 북한 핵위협을 직시하여,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감정적인 수준의 대응을 자제하고, 격변하고 냉엄한 국제정치의 변화와 그 속성을 통찰하여 우리 자손도 한반도에서 안전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 수준에서 차선에 대한인 ‘사드배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군사적으로 극복할 있도록, 만에 하나 예상되는 북한의 핵공격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한국형 공격·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외교적·군사적·기술적인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 허용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공약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공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다.

#### 4.3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제고(외교 분야)

북한의 핵능력이 조만간 완성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핵무장을 하고 있는 적대적인 국가와 인접하여 최전방에서 방어해주는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이다[4].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과 핵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막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몇 개 도시에 피해를 끼칠 수 는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서, 또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강화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15]. 한국이 공산화되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한미동맹 유지에 의한 미국의 이익은 사활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권에 편입

될 경우 이들의 태평양 진출은 더욱 용이해지고, 따라서 미국이 유사시 이들을 봉쇄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항구와 공항을 사용할 경우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 방어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를 체결한 이후 경제·사회·문화 등 상호교류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왔으며, 급기야는 2008년에는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태’ 등에 대하여는 한국의 존재를 외면하면서 냉정과 자제를 주문하였다. 또한 북한 김정은 체제하에서 지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따른 다양한 제재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여하한 경우라도 북중동맹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동맹정치는 필연적으로 반동맹의 강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소극적인 중국의 대응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더욱 압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 5. 결 론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2016년 한해에만 2차례의 핵실험과, 20여회에 걸쳐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도발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단순히 체제유지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고도화된 핵도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남한과의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일거에 극복하였음은 물론 일단 유사시 주일미군과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능력을 과시하여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가로 인정과 대외협상력을 높이려는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도발 능

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생존의 터전인 한반도 전 지역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에 처해있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한국의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국민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북한의 도발 야욕 억제에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여하한 핵공격에 대비한 독자적인 ‘한국형 방어·공격체계’를 조속히 완비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기조 하에서 미국과 다양한 정책적 공조를 긴밀히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좌시하는 행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제 한국의 정치권과 전 국민은 우리 생활의 터전인 한반도를 인류역사와 함께 변영의 터전으로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국제정치의 변화와 본질을 통찰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서 현재의 위중한 북한의 핵위협을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방향,” 전략연구, 제56호, pp. 185, 2012.
- [2] 김일수, “한미 군사동맹의 초기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미국학 논집, 제35집 2호, pp. 65-66, 2003.
- [3] 박계호, “한반도 위기발생시 미국의 개입 결정요인,” 국방연구, 제56권 1호, pp. 61, 67-69, 2013.
- [4] 박휘탁,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 pp. 333-336, 338, 2016.
- [5]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국제정치 논총, 제41집 2호, pp. 16, 2001.
- [6] Albright David,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U.S.-ROK Institute at SAIS, Vol. 24, No. 2, pp. 19-30, 2015.
- [7] Michael F. Altfeld, “The Decision to Alliance: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Winter-1984.
- [8]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39, No. 1, pp. 156-179, 1985.
- [9]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p. 904-933, November-1991.
- [10] Woolf. Amy, “U.S. Strategic Nuclear Forces: Background, Developments, and Issues,” CRS Report, Vol. 28, No. 2, pp. 124-126, November-2015.
- [11] Albright. David,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Series, U.S.-ROK Institute at SAIS, Vol. 18, No. 3, pp. 19-30, 2015.
- [12] 국방부, ‘한미동맹 60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13] 국방부, ‘2016 국방백서’, 국방부, 2019.
- [14]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연경문화사, 2004.
- [15] U.S. Department of Defence, ‘2014 Quadrennial Defence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ce, 2014.
- [16]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Brief Edition’, McGraw-Hill, 1993.
- [17] 동아일보, 2016년 3월 9일자, 11면

————— [저자소개] —————



김연준 (Kim Yeon Jun)  
1983년 3월 문학사  
1996년 11월 국방관리진공 석사  
2012년 8월 경호학 박사  
현재,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kyj23509@naver.com